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한국의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혁신 과제*

김학수

Dec. 06. 2022

Korea's Leading Think Tank



* “김학수 외, 『코로나19 이후 조세·재정정책방향의 재검토』, 연구보고서 2021-6, 한국개발연구원” 중 ‘제2장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여력 확보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고 최근 정책방향을 추가하여 재구성함.

C O N T E N T S

1. 최근 재정정책 기조의 변화

- 새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 중기 재량지출 계획의 변화
- 중기 국가채무비율 관리 계획의 변화

2. 장기재정전망

- 2021~2060년 기준선 전망 기본 전제
- 2022~2026년 기준선 전망 결과

3. 재정위험요인

- 인구 저위기준 실현시
- 재량지출 통제 실패시

4. 재정혁신 과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 재량지출 추가 통제
- 세입기반 확충
- 재정준칙 법제화

1. 최근 재정정책기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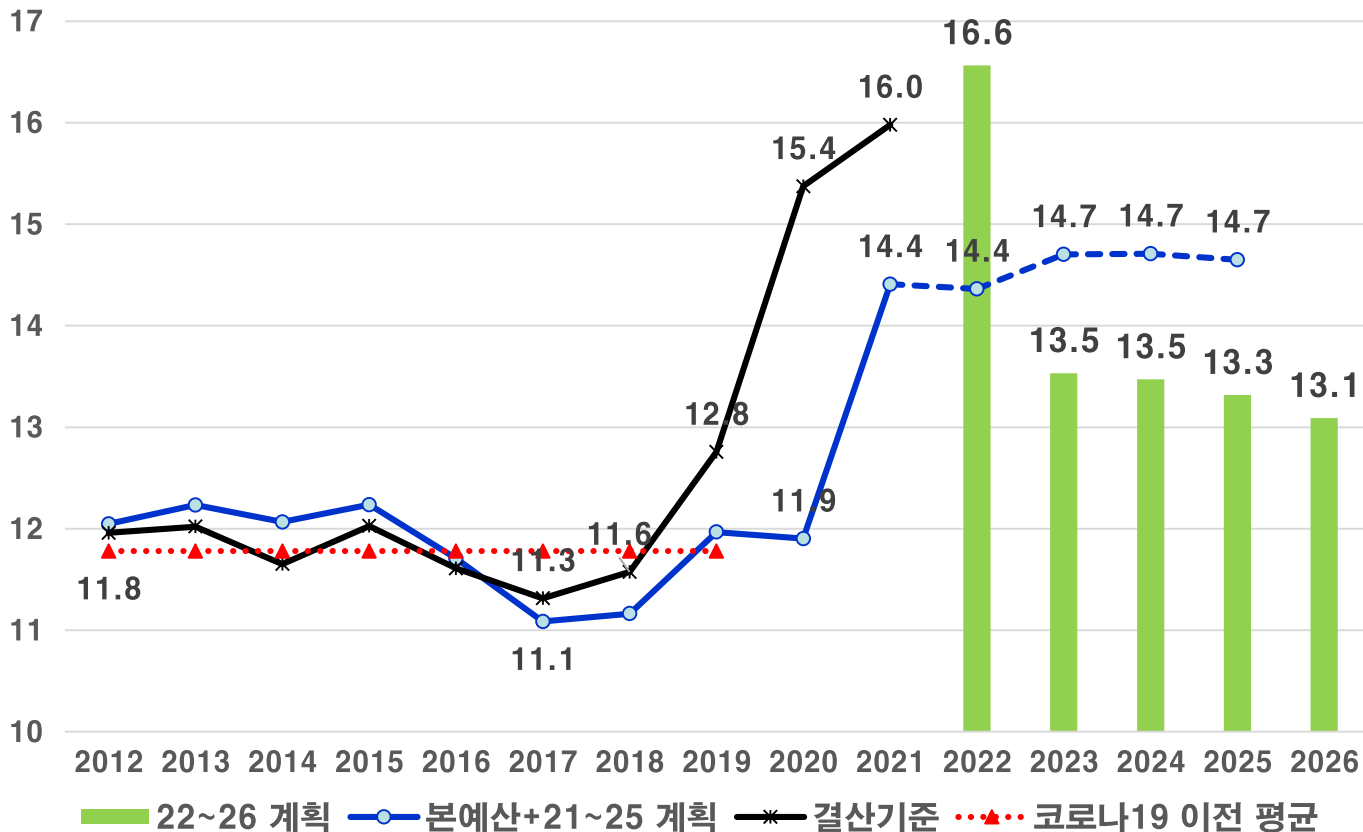
① 새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 **(기본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정상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국정목표1-국정과제 05)**
 - **(지출효율화) 저성과 · 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 정상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 의무지출 · 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 · 제도화된 구조조정 시행
 - 중앙 · 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재원조달 다변화)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 ·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 뒷받침**
 -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핵심사업을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 강화**
- **경제사회 위기 시 적극적 · 과감한 재정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회복국면부터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 필요**

1. 최근 재정정책기조의 변화

② 중기 재량지출 계획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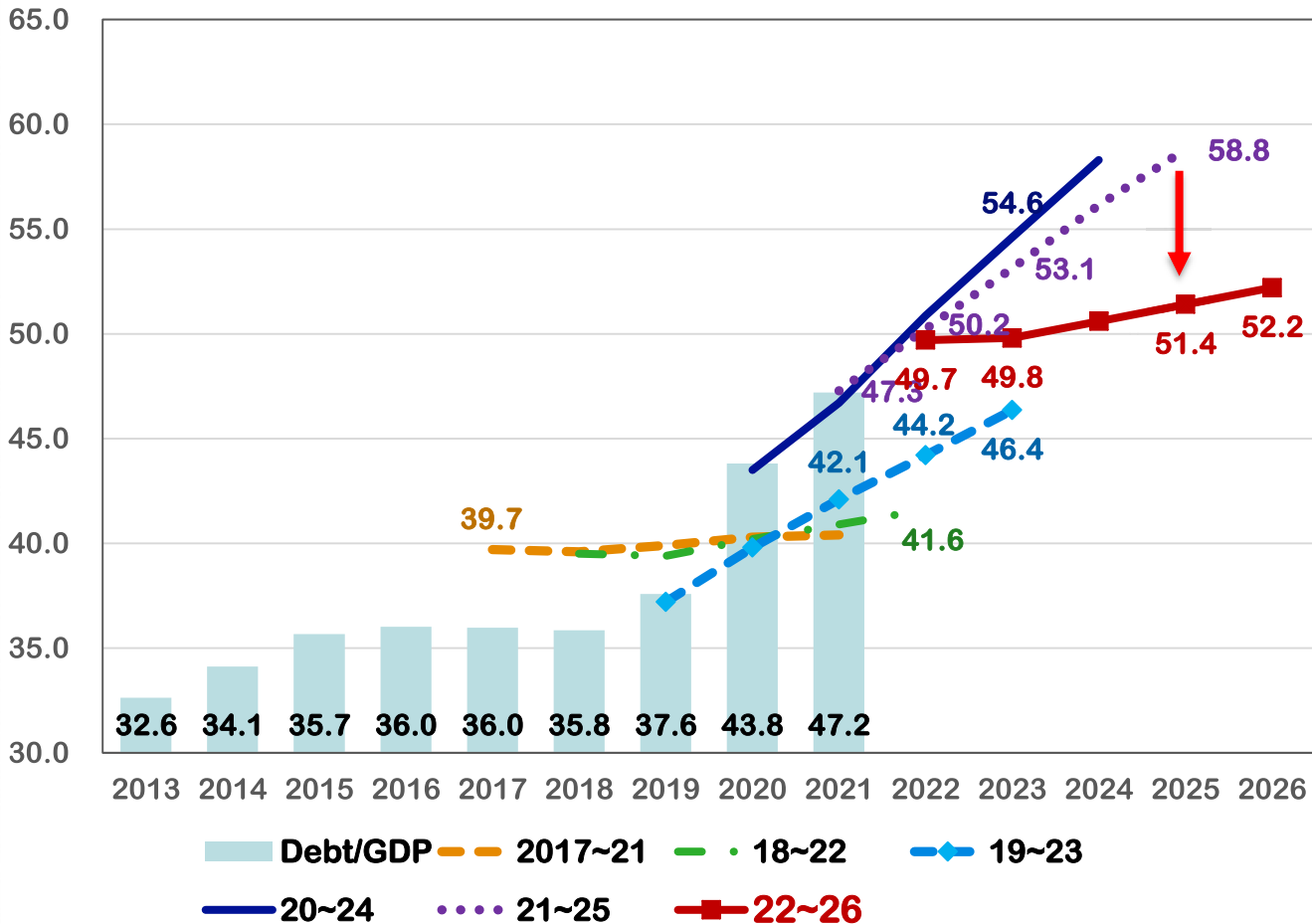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 2023년 부터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13%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재량지출 비율은 14% 중후반 수준
 - 2022년 당초 계획은 14.4% 수준이었으나 2차 추경으로 16.6%까지 확대
 - 전년도 중기 재량지출 계획 보다 약 1.2~1.4%포인트씩 축소할 계획
- 코로나19 위기 이후 재량지출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던 전 정부와 대조
 - 재량지출 관리는 재정건전성 및 미래 위기 대응 여력 확보에 기여

1. 최근 재정정책기조의 변화

③ 중기 국가채무비율 관리 계획의 변화



- 2022~2026년 기간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을 2.5%p로 관리할 계획
 - 계획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2.2~2.6%로 대폭 축소 계획
 - 2018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국가채무비율이 2019년 부터 증가 시작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2020~2024년 국가채무비율 실적과 계획 모두 빠르게 악화
 - 2021년 예상 밖 국세수입 호조로 2021~2025년 국가채무비율 계획 소폭 개선

2. 장기재정전망

① 2021~2060년 기준선 전망 기본 전제

➤ (인구 전제) 장래인구추계 중위 기준(2019년 통계청 발표)

- 전체인구: 2021년 51.8백만명 ⇒ 2060년 42.8백만명, 2021년 인구의 82.7% 수준
- 노년부양비: 2021년 23.1% ⇒ 2060년 91.4%
- 생산가능인구비율: 2021년 71.6% ⇒ 2060년 48.5%

➤ (주요 거시변수 전제) 인구 전제를 반영한 2020년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중위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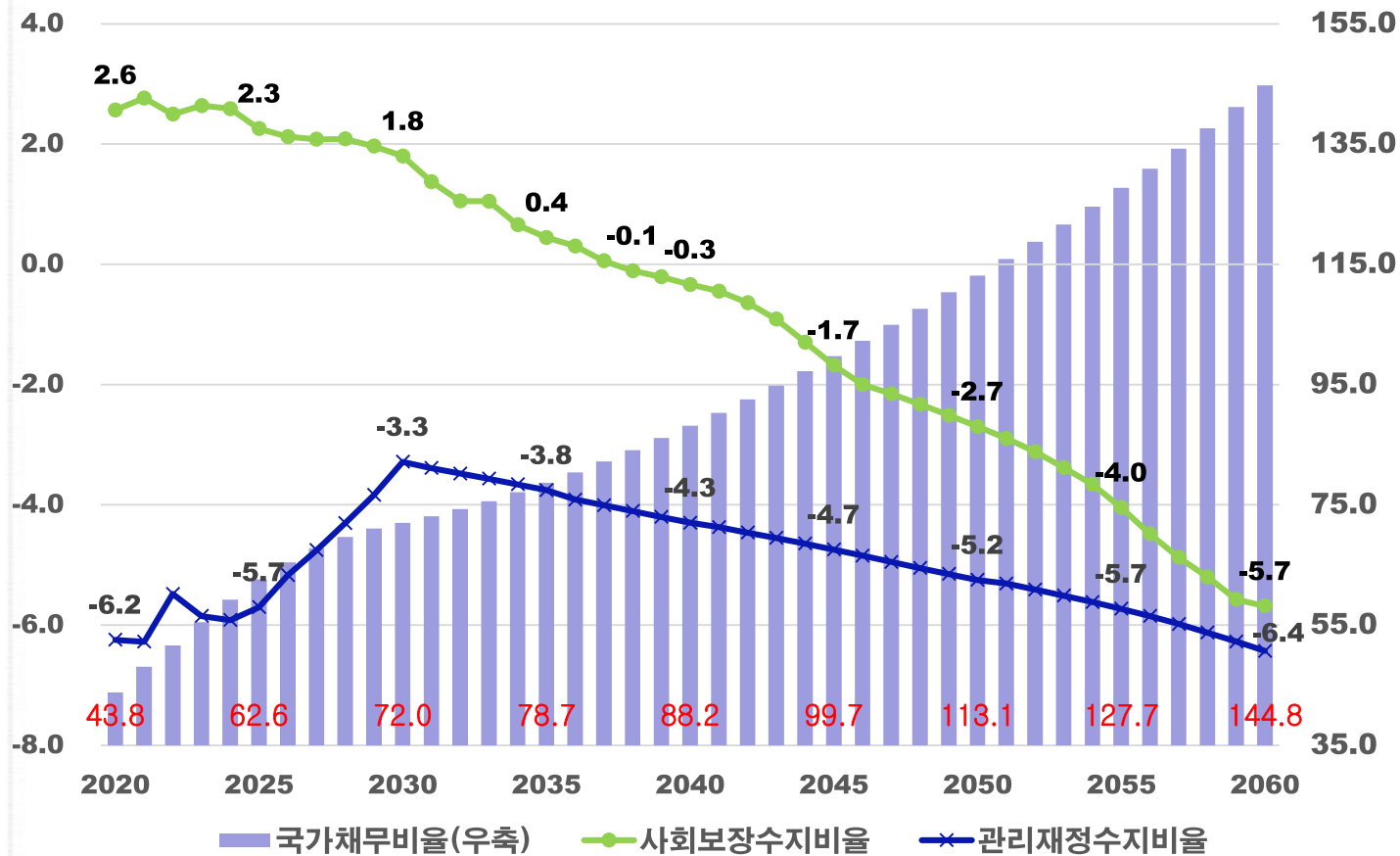
	경상GDP 증가율	실질GDP 증가율	노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CPI 상승률	명목임금 상승률
2021~2030	3.8	2.3	63.3	3.7	61.0	2.0	4.1
2031~2040	2.9	1.3	60.6	3.4	58.6	2.0	4.1
2041~2050	2.4	0.8	56.5	3.3	54.7	2.0	4.1
2051~2060	2.1	0.5	53.5	3.4	51.7	2.0	4.0
Overall	2.8	1.2	58.5	3.4	56.5	2.0	4.1

➤ (재량지출 전제) 기준선 전망시점의 정부 중기계획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후 코로나 19이전 수준 회복

- 1) 21~25 중기계획 반영
- 2) 26~30년 기간 동안 매해 점진적으로 GDP대비 재량지출 비율 축소하여 2030년 11.8%
- 3) 31년 이후 11.8% 유지

2. 장기재정전망

② 2021~2060년 기준선 전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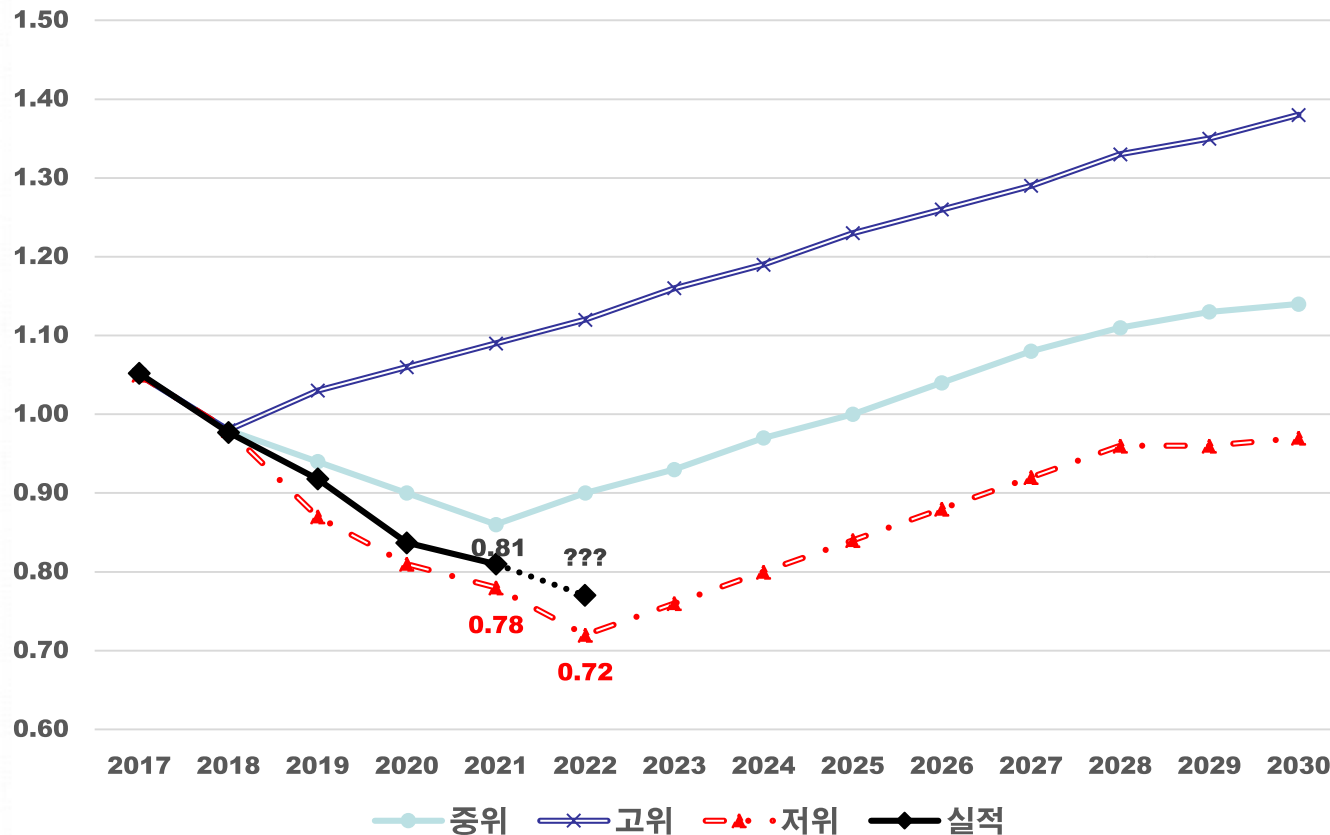


- 국가채무비율 2020년 43.8%에서 2060년 144.8%로 확대
 - 사회보장수지 2038년 적자 전환
 - 국민연금기금 2054년 고갈 전망
- 26~30년 재량지출 비율의 정상화 전제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개선
 - 2025년 14.7%에서 2030년 11.8%로 점진적 축소
 - 관리재정수지 -6% 내외 수준에서 2030년 -3.3%로 점진적 개선
 - 이후 GDP 증가율과 동일한 증가율로 재량지출 확대되며 적자 확대

3. 재정위험요인

① 인구 저위기준 실현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 170.2%(기준선 대비 25.4%p ↑)

2019년 장래인구추계 합계출산율 전제 및 최근 추이



➤ 합계출산율 2021년 0.81명으로 저위기준 전제(0.78명)에 근접

✓ 전체인구 2060년 38백만명, 73.7% of 2021 (기준선 대비 480만명 ↓)

✓ 노년부양비: 2021년 23.1% ⇒ 2060년 97.5% (기준선 대비 6.1%p ↑)

✓ 생산가능인구비율: 2021년 71.6% ⇒ 2060년 47.2% (기준선 대비 1.5%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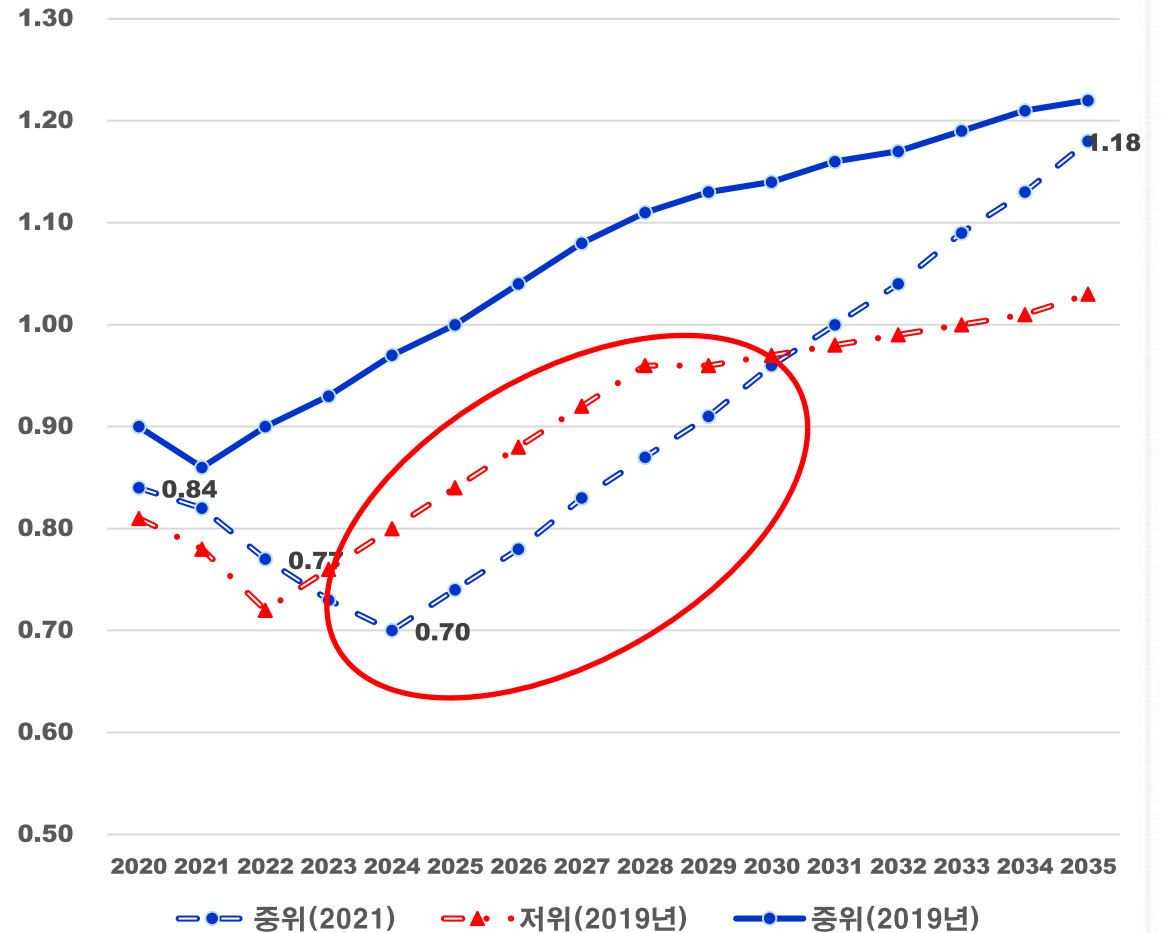
➤ 2022년 합계출산율 전년 동기대비

✓ -0.02(1Q), -0.07(2Q), -0.03(3Q)

3. 재정위험요인

<참고> 최근 2019년과 2021년에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합계출산율 전제 비교

	중위			고위			저위		
	2021년 발표(A)	2019년 발표(B)	A-B	2021년 발표(A)	2019년 발표(B)	A-B	2021년 발표(A)	2019년 발표(B)	A-B
2020	0.84	0.90	-0.06	0.84	1.06	-0.22	0.84	0.81	0.03
2021	0.82	0.86	-0.04	0.83	1.09	-0.26	0.81	0.78	0.03
2022	0.77	0.90	-0.13	0.85	1.12	-0.27	0.73	0.72	0.01
2023	0.73	0.93	-0.20	0.88	1.16	-0.28	0.68	0.76	-0.08
2024	0.70	0.97	-0.27	0.92	1.19	-0.27	0.65	0.80	-0.15
2025	0.74	1.00	-0.26	0.96	1.23	-0.27	0.61	0.84	-0.23
2030	0.96	1.14	-0.18	1.16	1.38	-0.22	0.77	0.97	-0.20
2035	1.18	1.22	-0.04	1.36	1.44	-0.08	0.94	1.03	-0.09
2040	1.19	1.27	-0.08	1.39	1.45	-0.06	0.95	1.09	-0.14
2045	1.20	1.27	-0.07	1.40	1.45	-0.05	1.00	1.10	-0.10
2050	1.21	1.27	-0.06	1.40	1.45	-0.05	1.02	1.10	-0.08
2060	1.21	1.27	-0.06	1.40	1.45	-0.05	1.02	1.10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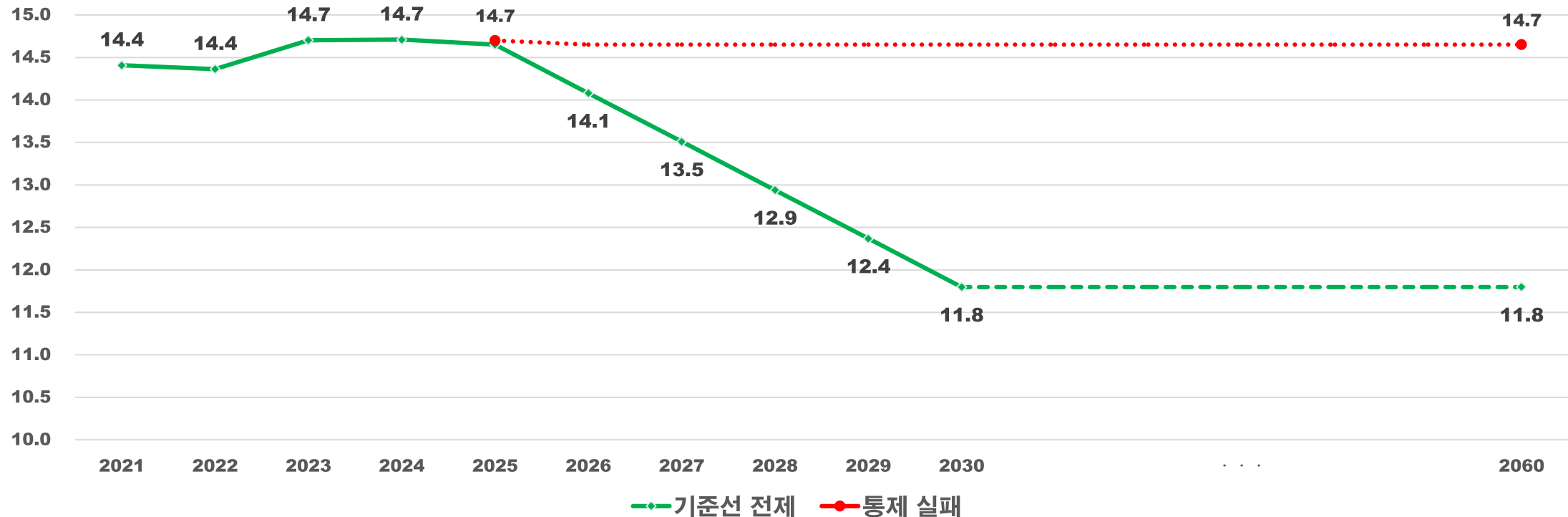


3. 재정위험요인

② 재량지출 통제 실패시: 국가채무비율 2060년 230.9%(기준선 대비 86.1%p ↑)

➤ 21-25 계획 2025년 14.7%를 2026~2060년 유지하는 경우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기준선 전제 vs. 통제 실패



3. 재정위험요인

<참고> 위험요인 실현 시 국가채무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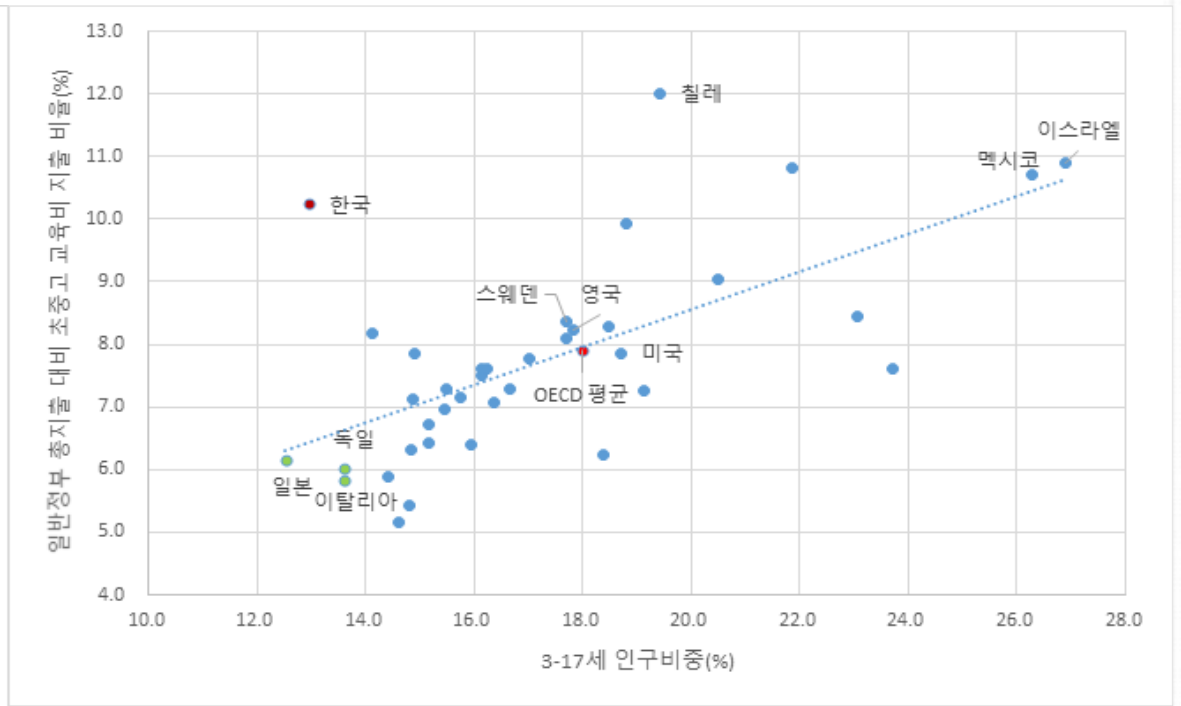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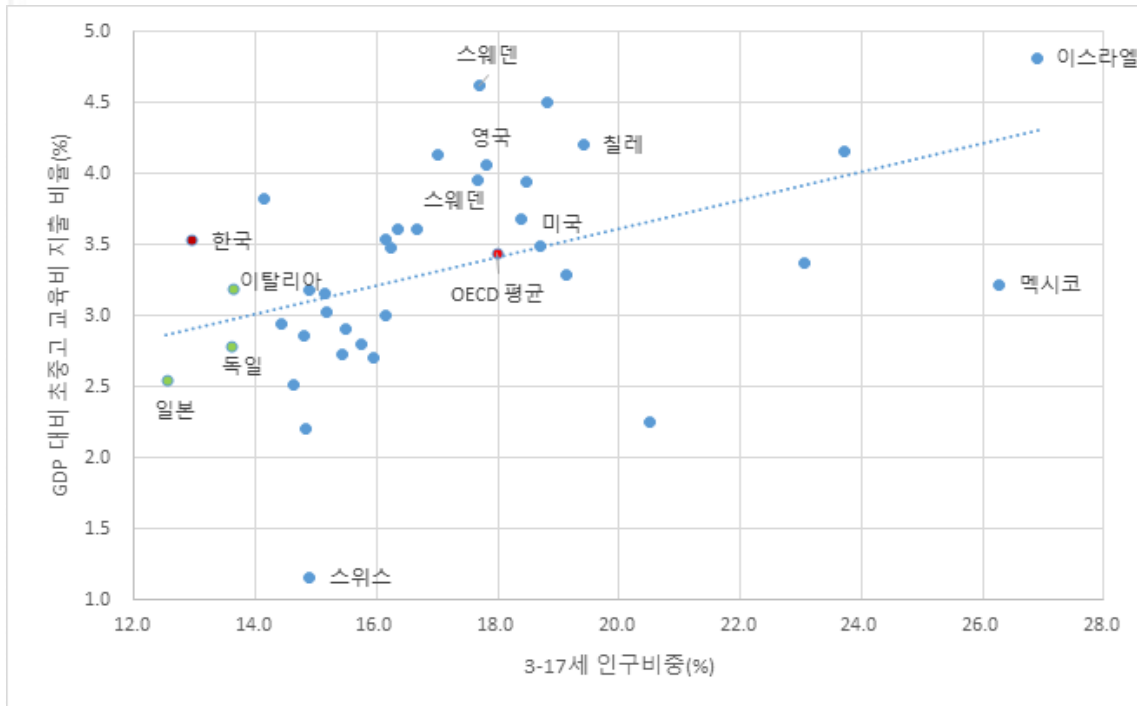
	기준선 국가채무비율(%)	인구 저위 실현		재량지출 통제 실패	
		국가채무비율(%)	기준선 대비(%p)	국가채무비율(%)	기준선 대비(%p)
2020	43.8	43.8	-	43.8	-
2025	62.6	64.0	1.3	62.6	-
2030	72.0	75.0	3.0	81.0	9.0
2035	78.7	83.5	4.8	101.5	22.9
2040	88.2	95.2	7.0	124.2	36.0
2045	99.7	109.8	10.1	148.5	48.8
2050	113.1	127.2	14.1	174.5	61.4
2055	127.7	146.8	19.1	201.4	73.7
2060	144.8	170.2	25.4	230.9	86.1

4. 재정혁신 과제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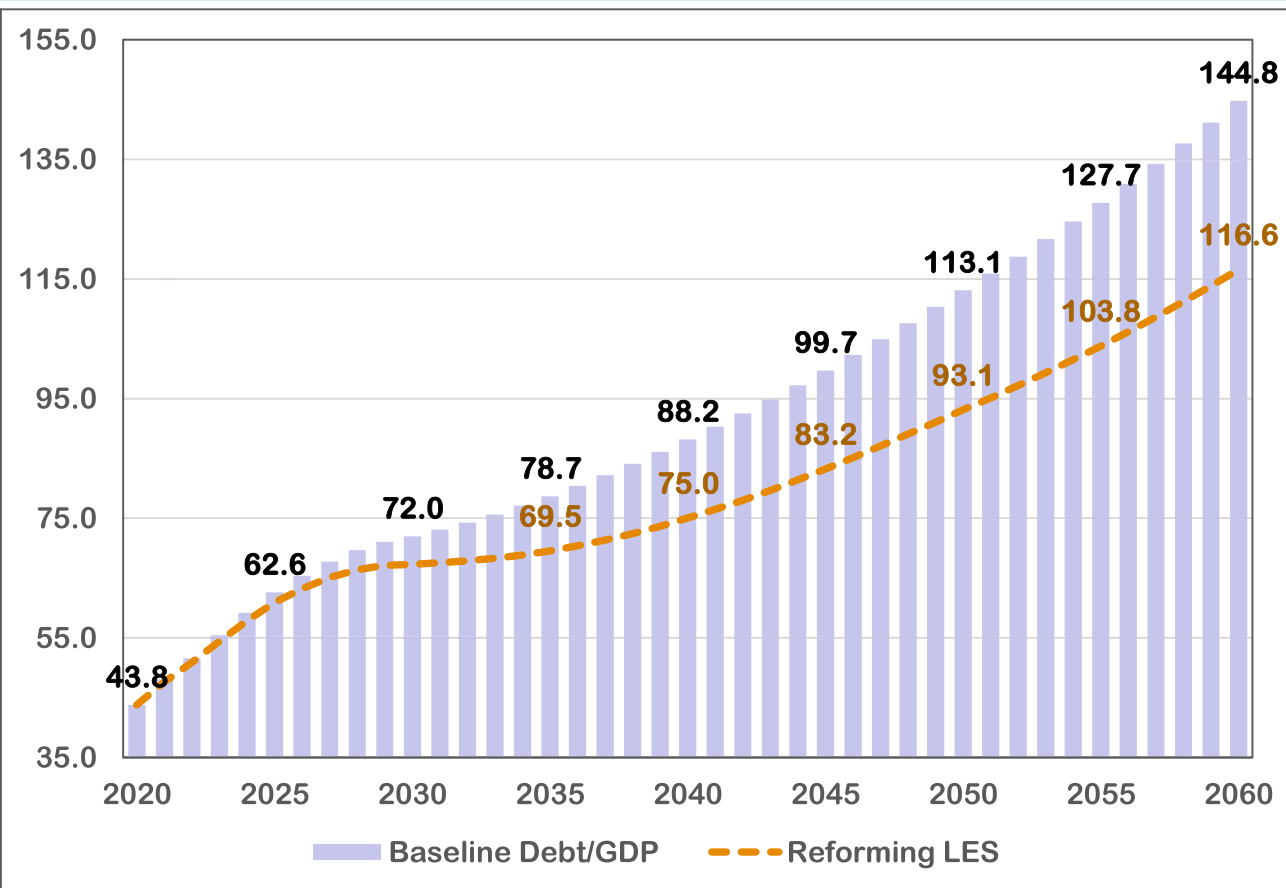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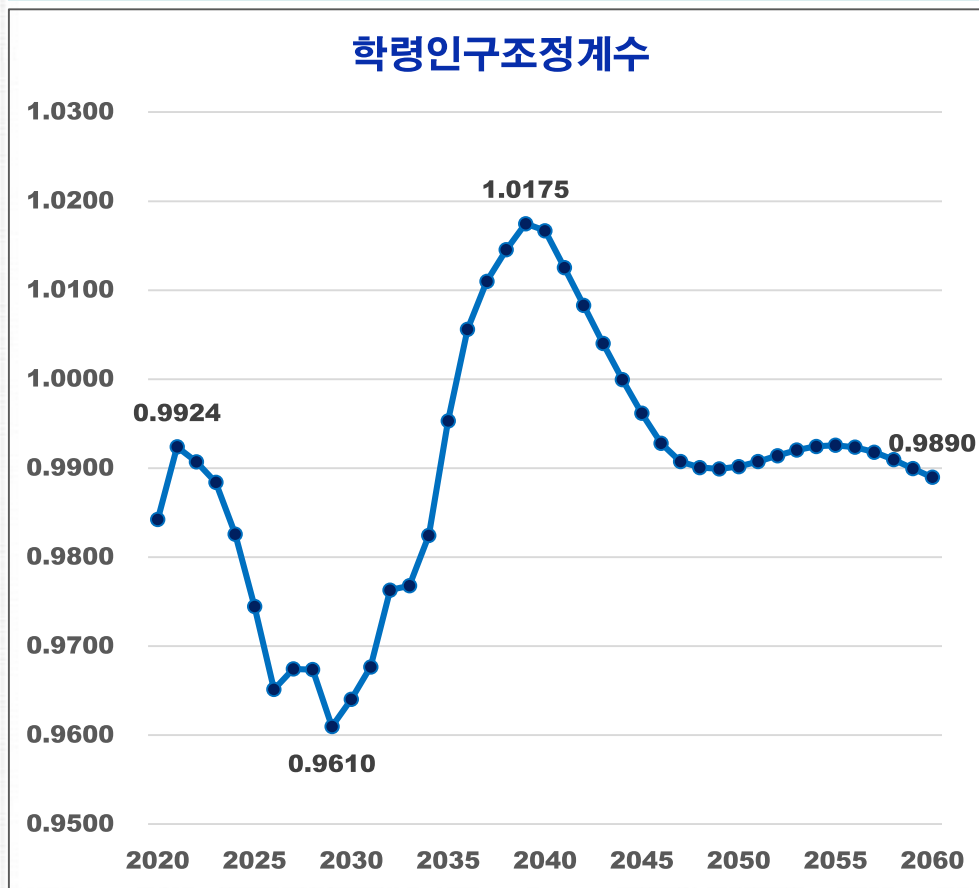
-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은 교육공급자를 위한 제도로써 국가 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비효율적**
 - **학령인구 비중을 고려할 때, 초중고 교육비 지출이 주요국에 비해 과다하게 배분**

3~17세 학령인구 비중과 초중고 교육비 지출 국제비교: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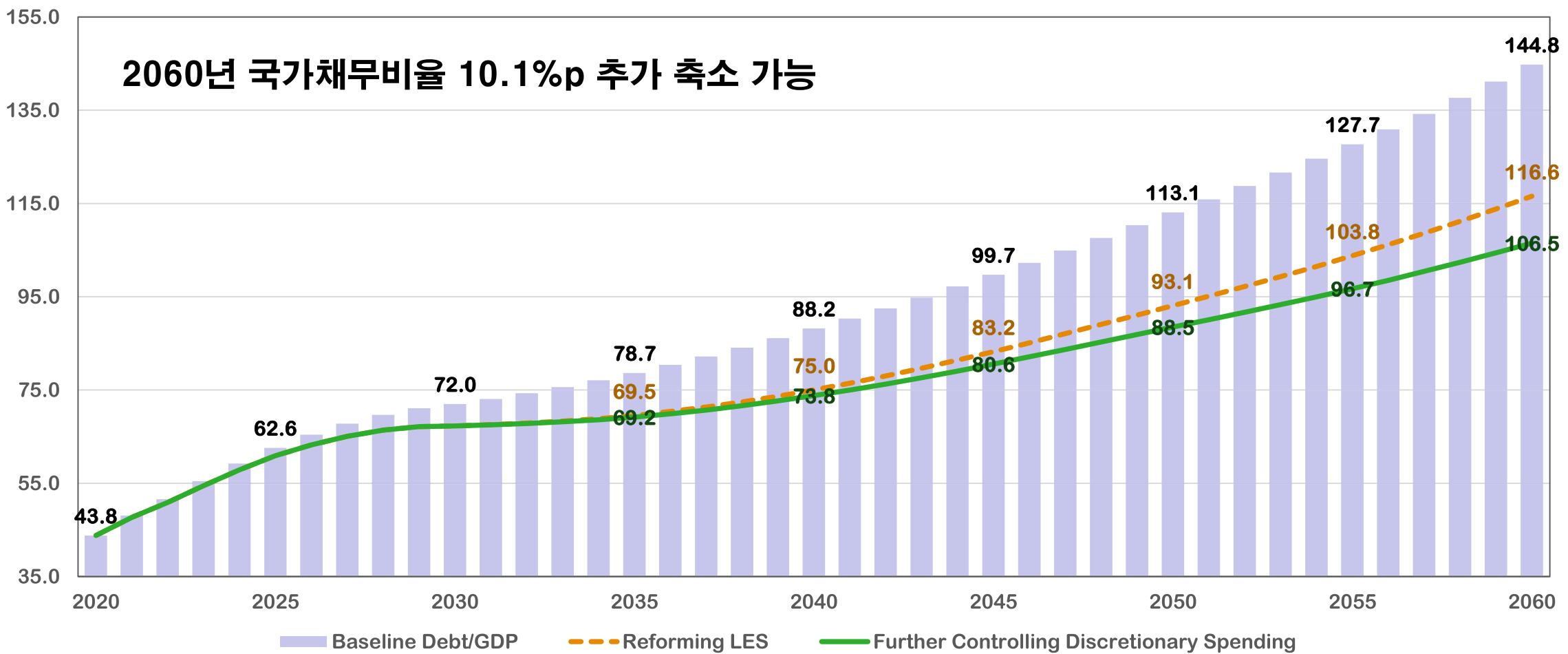
4. 재정혁신 과제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부금_t = (1 + 경상GDP증가율_t)교부금_{t-1} \left(\frac{학령인구비율_t}{학령인구비율_{t-1}} \right)$



4. 재정혁신 과제

② 재량지출 추가 통제: 2031년부터 점진적으로 2060년 11.1%(코로나19 발생 이전 최저 수준)으로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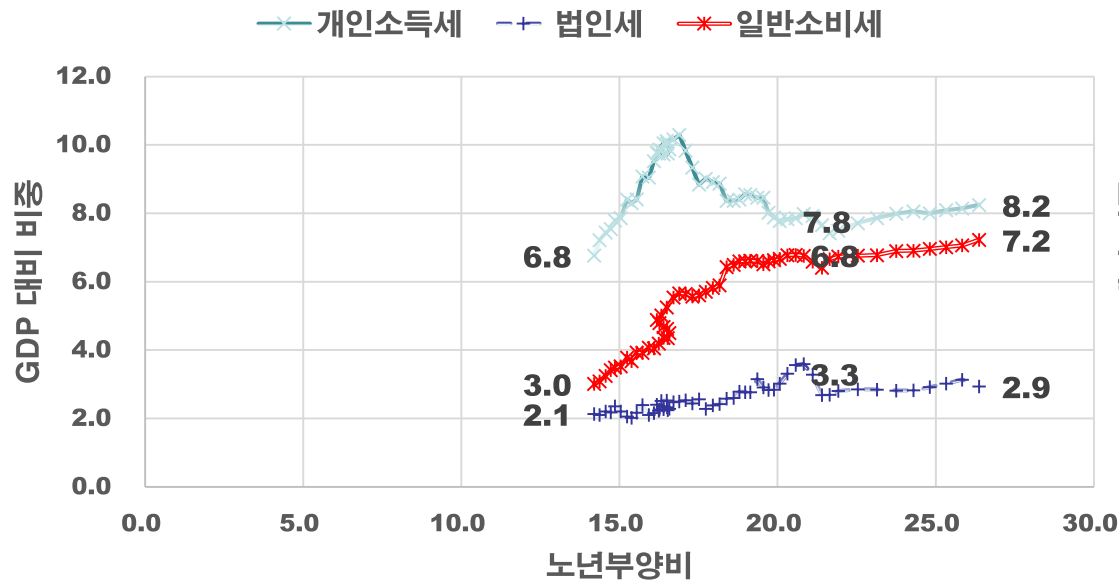
4. 재정혁신 과제

③ 세입기반 확충: 현재의 국가 재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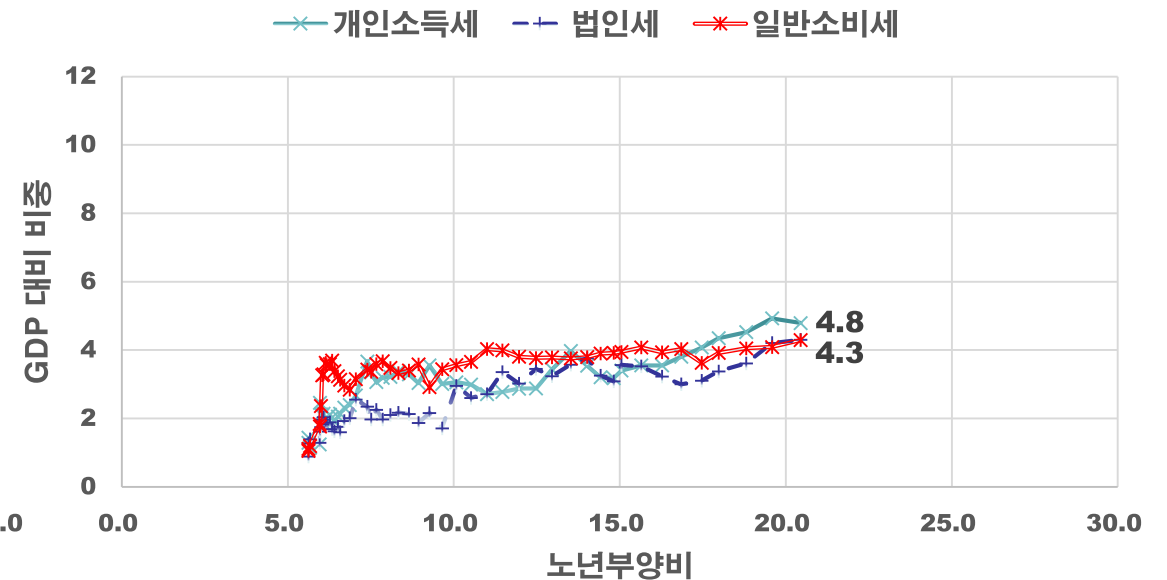
➤ 노년부양비 15%에서 20%로 증가하는 기간 주요 국가들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수확보 기능 강화

- 노년부양비 20% 수준에서 OECD 평균 소득세수 비중 7.8%, 부가가치세수 비중 6.8%
- 한국의 소득세수 비중 4.8%와 부가가치세수 비중 4.3%와 대조

OECD 평균(196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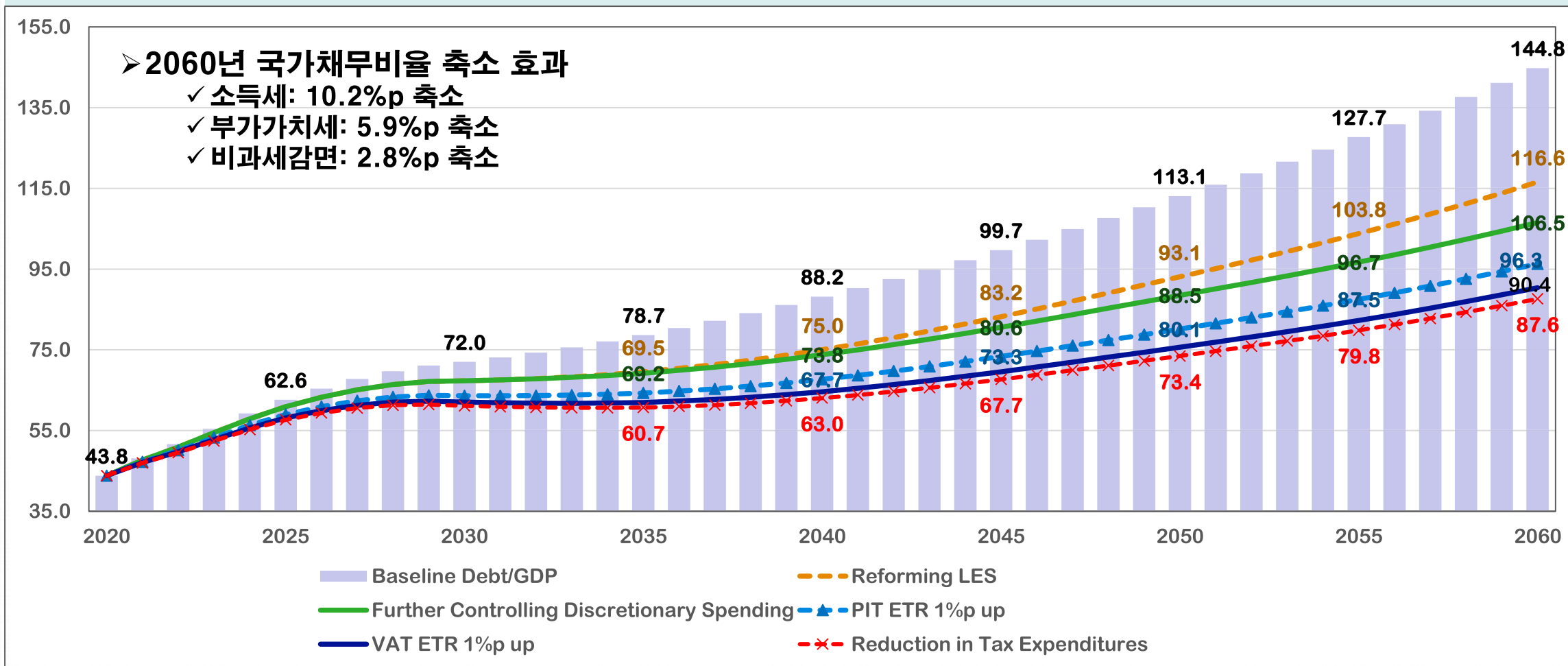


한국(1972~2019)



4. 재정혁신 과제

③ 세입기반 확충: 소득세와 부가세 실효세율 각 1%p씩 인상, 21년 기준 2.86조원 비과세감면 항구적 축소



4. 재정혁신 과제

④ 재정준칙의 법제화

➤ 재정준칙 법제화의 의미

-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미래세대에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재정혁신 과정의 첫 걸음
-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재정혁신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

➤ 재정준칙 법제화 이후의 과제

- 재정이 항상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필요
 - ❖ 예산 편성과정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출효율화 과정을 명시적으로 제도화
- 장기재정전망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준칙 준수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 재정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집행



감사합니다.